선학원, 분원 반대에도 토지 매각 강행

선학원 일방 행정에 몸살 앓는 총림선원

총림선원, 토지매각 반대 표명
추가 매각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분원토지 추가 매각 추진 논란

진주시에 '조속재결 신청' 제기도
분원관리 규정 따른 부동산 매각
절차상 위배 정황도 제기돼 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장과 창건주를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원이 이후 매도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음에도 다른 토지까지 추가로 매각하려던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선학원은 또 다른 토지에 대한 추가매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조속재결 신청'을 제기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진주시와 총림선원 소속의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선학원은 총림선원 모르게 진주시에 13여억 원을 받고 매도한 산 18-1번지 외에도, 산 155번지를 비롯한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학원은 산 155번지에 대해 진주시 · 경남개발공사에 해당 토지의 손실보상금 재협의를 요구한 데 이어 '조속재결 신청' 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속재결 신청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 대해 재결 신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원인 총림선원 창건주와 분원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각 반대의사를 재차 표명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림선원 토지 가운데 진주시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편입공고된 부지는 산18-1번지, 612번지, 612~1번지, 620번지, 621번지 등 6필지다. 이에 따라 총림선원은 2018년경부터 진주시와 해당 부지의 임대 및 대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5월경 진주시 관계자로부터 선학원이 해당 필지들에 대한 매각협의를 진행 중임을 고지받고, 즉시 선학원과 진주시에 공문을 발송해 "매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당시 이미 산18-1번지는 진주시에 매각된 이후였다.

이에 대해 총림선원 관계자는 "스님들이 남은 필지라도 지키기 위해 선학원을 찾아가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과정에서 선학원 업무담당자들을 통해 앞으로 모든 총림사 토지의 수용 관련 결정은 총림사 동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지만 매각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총림선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은 선학원 측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해당 부지들이 총림선원의 수행환경 보존과 유지, 관리 뿐 아니라 총림선원의 존폐위기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매매형식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편입방법에 대해 진주시와 논의해 온 협의안과 구체적인 사유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학원도 이사장 법진 스님 명의의 공문을 통해 "총림선원에 대한 종무행정 지도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내용을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회신했다.

진주시 역시 총림선원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상기 필지(총면적 4만 5223㎡)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무상임대 방안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법령에 근거한 '녹지활용계약서' 양식 등 협의안을 재차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중순경 선학원은 총림선원를 배제한 채 또다른 토지인 산155번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남개발공사에 발송했다. 분원이 토지 매각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당업무를 담당한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산18-1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로 산155번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기엔 여러 우려점들이 있다"며 "그러나 사찰 의지와 달리 선학원은 매각을 위한 조속재결신청까지 제기한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한 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선학원의 행보는 분원관리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학원 분원관리규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해당 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재단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무회의에 상정하며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한다' 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학원은 산18-1번지 매도과정에서 분원을 배제하는 등 분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매각을 결정하는 등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도 누락된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이후 분원이 토지매각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추가 매각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13억여 원의 존재에 대해 분원에 일체 알리지 않은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분원관리규정의 같은 조 4항에 따르면 '사사찰은 부동산 처분금액 중 재단운영기금을 처분금액의 10%로 한다' 고 명시돼 있지만, 2019년 이미 13억여 원의 매각대금을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분원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총림선원 창건주 A스님은 本紙와의 통화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 가 진행된 후에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매대금 13억 원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前 이사장 직무대행이자 총무이사 지광 스님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일을 통해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쟁 중단 · 희생자 극락왕생 염원"

조계종 사노위,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오체투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했다. 사노위는 4월 12일 오전, 전쟁중단과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까지 2.1km를 이마와 무릎, 팔꿈치를 바닥에 낮추는 오체투지로 나아갔다.〈사진〉

오체투지에 앞서 위원장 지몽 스님은 먼저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했다. 스님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아이와 여성, 노인 등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있다"고 통탄하고 "전쟁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증오심 그리고 적개심만 대물림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오체투지는 대웅전 부처님을 향한 삼배 후 조계사를 출발해 종각과 광화문을 거쳐 2시간 3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임은호 기자

"국가유산 명칭 변경, 전체주의적 발상"

문화재위 · 무형문화재위 11일
문화재 명칭 개선안 등 발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통칭
학계 · 시민단체 우려 제기해

기존 '문화재' 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으로 통칭하는 문화재청의 추진 개선안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전영우) ·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탁근)는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해 이를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에 전달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재화(財貨)의 느낌이 강한 '문화재' 의 '재(財)' 를 '유산(遺産)' 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통칭되며, 하위 분류 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의 명칭은 유지되지만, 국가무형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으로 바뀐다.

하지만 불교학계와 문화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선 취지는 공감할 만 하지만 '국가유산' 이라는 통칭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학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 '국가유산' 으로 통칭하는 것은 한계점이 명확하다. 여기서 '국가' 는 '정부' 로 이해되며 '국가 및 정부로 귀속된 유산' 으로 이해된다"면서 "국가 소유 문화재는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 사찰과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국가유산' 이라고 볼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 '국가유산' 으로 문화재의 통칭 명이 변경되면 수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은 일순 '국가유산' 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국가유산' 이라는 명칭에 대해 "전체주의적 행정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황 소장은 "문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의미한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범주에 현재 문화유산체계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은 예전 제국주의 · 전체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 체계가 '국가유산' 같은 특별명사가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보통명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도 " '국가유산' 이라는 통칭명을 듣고 1980년대 군사 정부의 이미지가 떠올랐다"며 "국가의 사전적 정의는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들에 '국가' 라는 주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